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수행과제명 :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추정

과제책임자 : 문유경 연구위원

Tel: 02-3156-7132, e-mail: mizmoon@kwidimail.re.kr

요 약

일 년에 2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은 0.75%인 156억에 불과함(2007년 기준).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증대하고 우선분야에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예산소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1. 정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정서적이고 물적인 유대관계를 갖는 가족 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구조적이며, 지속적이고 은폐되기 쉬운 특징을 가짐. 경찰 신고율도 매우 낮아 실제 발생률을 파악하기 어려움.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피해 양상과 심각성을 살피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가정폭력의 감소와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정부 예산 증액

- 가정 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가정 폭력 중 아내 폭력이 가장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가정 폭력 중 아내에 대한 폭력으로 범위를 좁혀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 가정 폭력의 사회적 비용은 2조 821억으로 추정됨. 폭력으로 인한 치료와 상담소 등 이용,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은 6,834억으로 추정됨. 이 중 의료비용이 6,117억으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함. 취업/가사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간적, 정서적 비용 등 간접 비용은 1조 3천9백8십7억으로 추정됨
- 일 년에 2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은 0.75%인 156억에 불과함(2007년 기준). 정부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174조 9852억의 0.009%에 불과함
- 가정폭력 감소와 피해자 보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예산을 수반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임

□ 가정폭력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의 집중적인 지원 대책 필요

- 사회조사에 의하면 일년에 중한 폭력을 당한 아내가 약 5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같은 해에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사회 서비스 시설을 이용한 여성은 약 10만명 수준으로 파악되어 나머지 약 40만여명은 전혀 정부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정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집중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범죄행위를 근절하기가 매우 어려움. 가해자의 신상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범죄통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황과 피해자의 보호에 관련된 통계의 개발이 필요함

□ 기존 가정폭력 조사의 개선

- 여성부에서 실시한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는 매우 중요한 조사로서 가정 폭력의 모든 유형을 다루고 있음. 그러나 남편의 아내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 남편의 아내폭력 33.1%, 아내의 남편폭력 27.1%, 상호폭력 19.9%로서, 성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여짐. 반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범죄의 69.3%가 남편의 아내폭력인 반면 아내의 남편 폭력은 2.9%로 아내에 대한 폭력이 훨씬 심각함. 이에 따라 향후 조사에는 아내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는 조사설계와 분석이 필요함

3. 정책효과

- 우선정책분야에 예산을 할당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 정책의 실효성 제고
-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관련 예산의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예산소요액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